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657
----------	------

발의년월일 : 2026년 4월 20일
발 의 자 :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교육특별위원장

1. 주 문

-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오픈채팅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 거래 알선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마약 거래 알선 정보의 업로드 단계 탐지·차단, 재업로드 방지, 확산 기능에서의 노출 차단 등 선제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위한 감독·집행 수단을 마련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함.

2. 제안이유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마약 거래 알선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며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마약 유통 정보에 쉽게 노출되는 등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그러나 현행 제도는 게시물 삭제 요청 등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마약 거래 정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선제적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마약 거래 알선 정보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탐지·차단 등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마약류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 송 처

- 가.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 플랫폼 ‘마약 거래 정보’ 선제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마약 거래 알선 정보가 급격히 확산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거래 제안이나 연락처 게재 등 마약 유통 정보가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상시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마약 범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대응은 게시물 삭제 요청이나 접속 차단 등 사후 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게시물 생성과 확산, 계정 재생성 등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불법 정보가 이미 다수 이용자에게 노출된 이후에야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 법률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마약 거래 알선 정보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시스템 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로드 단계에서의 자동 탐지 및 차단, 동일·유사 게시물의 재업로드 방지, 반복 계정에 대한 제재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조치를 요구하거나 감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플랫폼의 대응이 자율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은 위험평가와 비례적 안전조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이용자가 불법 정보를 사전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방식은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마약 거래 알선 정보의 온라인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마약 관련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마약 거래 알선 정보에 한정하여 선제적 차단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 게시물 업로드 단계에서의 자동 탐지·자동 차단 또는 보류 심사체계 구축,
- 동일·유사 게시물의 재업로드 차단 및 반복 계정에 대한 제재,
- 검색·추천·자동완성 등 플랫폼의 확산 기능에서 마약 거래 관련 정보의 선제적 노출 차단 의무,
-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정 명령 등 감독 및 집행 수단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거래 알선 정보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 관련 불법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마약류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및 마약 거래 알선 정보에 대한 선제적 차단 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4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